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광주 자치구 '준비 총력'

동구, 직무 강화교육...서구, 퇴원환자 상담 추진 남구, AI 로봇인형 지원...북구, 돌봄 현황 조사 광산구, 지원 대상자·복지자원 정비·책자 발간

오는 27일부터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광주 5개 자치구가 대응 체계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총 940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다.

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6~2027년을 도입기, 2028~2029년을 안정 기, 2030년 이후를 고도화기로 구분해 대 상자 확대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통합돌봄 시행 첫해인 올해는 일상생활 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그리고 65세 미만이지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 애인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필요성을 인정한 주 민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자치구들은 대상 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담당 인력 교육 등 제도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내 고 있다.

이중 동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앞서 20일까지 제도 안내를 진행 하고, 26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 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강화 교육을 실시 한다.

서구는 지난 3일 한국재가장기요양기 관협회 관계자와 면담을 시작으로 동장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교육을 진 행했으며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 도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또 통합돌봄 수 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 협약 병원 9곳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통합돌봄 상담을 진행한다.

남구는 초기 차매나 우울 증상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AI 돌봄 로봇 인형을 지 원해 정서 관리와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치매 환자 나 1개월 내 퇴원·수술 후 회복 중인 노인 을 대상으로 상담과 건강관리, 한의약 지 원 등을 제공하는 '기운차림 한의약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북구는 올해 1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산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력 병원을 모 집했다.

지난달부터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서비 스 수행기관과 의료·요양통합돌봄 유관 기관, 시니어 주거복지지원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달부터는 민관 돌봄 자원과 서비스 현황 조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관 관계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며 체 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산구 역시 기존 통합돌봄 대상자 644 건을 정비하고 복지자원 등록과 개인별 지원계획 지원 연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20일 의료·요양통합돌봄 실무 TF 회의를 개최해 21개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조정과 의료·요양통합돌봄 자원목록 책 자 발간 등을 논의한다.

30일 퇴원환자 재가복지 지원 협약 병 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따른 실적도 수시 관리할 계 획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6:41	달림	05:37
맑음	18:41	달림	16:50



광주	☀️	3~17
목포	☀️	2~13
여수	☀️	6~14
순천	☀️	3~16
구례	☀️	2~18
광주	☀️	-1~16
신도	☀️	2~16
흑산도	☀️	4~11
진남	☀️	1~18
진도	☀️	1~14

목포	미물(고)	00:46 / 13:27
	샘물(저)	06:19 / 18:54
여수	미물(고)	08:32 / 20:33
	샘물(저)	01:57 / 14:33

폐가에 숨은 전과자 체포

가 숨어있던 60대 현상수배범이 경찰에 체포돼.

16일 광주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께 서구 농성동 한 폐가에서 전과 60 범 A씨를 검거.

당시 '달아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경찰은 일 대 폐가를 수색하던 중 한 빈집 옥 상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60대 남성 A씨를 발견.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와 근로 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되고 벌 금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과 거 성폭력·상습 사기 등 혐의로 60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관할 경찰서에 인계.

경찰 관계자는 "시민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치안 활동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민접촉 형 범죄예방활동으로 주민 안전 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시인재교육원에서 열린 '2026년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한 광산구장애인협회 활동 보호사들이 심폐소생술(CPR) 체험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 아이 낳을 병원 없다"...원정 출산 현실화

출생아 161명당 분만 인력 1명...서울·광주 절반 수준

전남지역의 분만 의료 인력이 전국 평 균에 크게 못 미치면서 임신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 시·군·구 3곳 중 1곳은 분만 의료기 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의 료 격차가 출산 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 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분투건강정 책팀에 의뢰해 진행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 재검정'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분만 의료기관에서 근 무하는 분만 인력은 총 2471명으로 집계 됐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명 으로 전체의 98.1%를 차지했고, 조산사 는 48명(1.9%)에 그쳤다. 2023년 기준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에 달한다 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 이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했다. 2024년 전국 출생아 수(23만8317명)를 기준으로 출 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은 평균 10.4명 이었지만 전남은 6.2명에 머물렀다. 반면 서울은 14.9명, 광주는 12.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분만 인력 1명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 역시 전남이 가장 많았다. 전국 평균은 96.4명이지만 전남은 161.3명으로 의 료 인 1명이 감당해야 하는 출산 규모가 훨 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81.5명, 서울은 67.1명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 었다.

분만 의료기관 자체가 없는 지역도 적

지 않았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곳은 84곳으 로 전체의 33.3%에 달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만4176명으로 전체 출 생아의 10.1% 수준이다.

이는 출생아 10명 중 1명은 거주 지역 이 아닌 다른 지역 병원에서 태어나고 있 다는 의미로, 임신부들이 출산을 위해 도 시를 옮겨야 하는 '원정 출산'이 이미 일 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현재 분만 체계는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지역 간 분만 인력 불균형 이 심화되면서 임신부가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관리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영석 의원은 "분만 인력의 지역 격차 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력의 균형 배치 와 조산사 역할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 마 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중·고생 '꿈드림미' 바우처 신청을"

시교육청 25~27일 학년별 집중신청기간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5일부터 학생교 육비를 지원하는 '꿈드림미' 바우처 사업 을 시작한다.

'꿈드림미'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간 접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 터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 영한다.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연간 중학생

최대 60만원, 고등학생 최대 100만원이 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이미 지원한 수 학여행비, 입학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 을 개인별 바우처 포인트로 산정하고, 연 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동시 접속에 따른 신청 과부하를 방지하 기 위해 학년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1학년은 25일, 2학년은 26일, 3학년은

27일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이 지 나더라도 3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학 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기존 에 바우처 지원을 받은 학생도 2026학년 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학생·학부모가 본인 명의 휴대 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해 '바우처시스 템'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바우처 포인트는 교재·도서, 학용품 구 입비, 대학 입학원서비 등 다양한 교육경 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가 자 격증 응시료까지 사용처를 확대해 학생의 진로·진학 활동을 지원한다. 김인수 기자

"교실 넘어 '실천 중심' 생태교육 확대"

전남교육청, 학교 교육 과정 속 생태전환교육 강화

전남도교육청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 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참여형 생태전환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 실천을 이어가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 램이다.

전남교육청은 16일 '2026 생태전환교 육 기본 계획'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연 계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공생을 위한 실천 문화 확산 △교원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 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 속 환경교육을 강 화한다. 모든 학교가 환경교육을 교육과 정에 반영해 운영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선도학교' 50곳을 지정해 지역과 학교 특 성에 맞는 생태전환교육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자연 현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확대 된다. 갯벌·하천·습지 등 지역 생태계를 직접 탐구하는 '습지학교'를 기존 8곳에

서 10곳으로 늘려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 과 지역 환경 이해도를 높인다.

학생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도 강화한 다. 학생들이 산·강·습·바다 등을 탐구하 고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공생의 길(물 길·숲길) 프로젝트'를 약 350개 팀 규모 로 운영해 학생 주도의 환경 실천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와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지9하는 학교(기관)'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일상 속에서 이 어 가도록 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집중 실천 주간과 기후행동 챌린지 등도 운영해 학 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참 여를 확대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3일 청사 중회의 정에 반영해 운영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선도학교' 50곳을 지정해 지역과 학교 특 성에 맞는 생태전환교육 모델을 확산할 계획을 공유하고 디지털 생태탐사지도 웹 운영 방법과 교육자원정보 도보탐사(플로 킹) 우수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대, 서남권 에너지전환 정책 논의 본격화

RE100 대응·분산에너지 전략 산단 중심 전환 방안 등 제시

전남대학교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 한 서남권 에너지전환 전략 논의를 본격 화했다. 광주·전남 산업단지들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업 RE100 대응 방 안을 모색하며 지역 기반 에너지전환 모 델 구축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16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지역개 발연구소는 지난 10일 전남대 경영대학 2호관에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서남권 에너지전환 정책 세미 나'를 개최했다.

16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지역개 발연구소는 지난 10일 전남대 경영대학 2호관에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서남권 에너지전환 정책 세미 나'를 개최했다.

기조발표에서 김호철 국가기후위기대 응위원회 기후감축정책국장은 에너지전 환을 기술·제도·산업구조 변화가 결합 된 사회기술적 전환 과정으로 설명하며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는 지난 10일 전남대 경영대학 2호관에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서남권 에너지전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모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광주·전남 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과 산업단지 중심의 친환 경 에너지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미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센터장 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단지 기반 에

너지전환 정책 필요성을 제시했고, 박진 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장은 여수·광양·대불·광주첨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 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성 문제를 지적 하며 ESS 기반 전력망 안정화 방안을 제 안했고, 변장섭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AI 기반 에너지관리 시 스템을 통한 산업단지 에너지 디지털 전 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단지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시됐다. 또 분산에너지 기반 지역 전력 체계 구축과 기업 RE100 대응을 위한 정 책 지원 확대의 중요성에도 공감대가 형 성됐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